

투데이 칼럼

통일 찬성론과 반대론

통일 찬성론과 반대론이 여전히 전하다.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먼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번영을 말한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덜 수 있다고 한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점도 내세운다.

사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되어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남과 북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은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남북 대치의 위험이 사라지면 한반도는 세계로부터 더욱 관심과 투자를 받게 된다.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로 발견할 수 있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산가족들이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60여년이 지나도록 부모와 형제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이산가족이 많다.

2016년 현재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13만 명이다. 이중 48%인 6만 명 정도만 생존해 있다. 생존자의 84%는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생존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는 상황이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다. 통일이 되어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야 한다.

이는 인도적 차원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 통일비용은 통일을 한 이후에 남북간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을 반대하는 측은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분단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분단비용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 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비용, 북한 도발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피해 등이 이에 속한다. 분단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통일비용은 통일 전후 시한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통일은 통일비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통일편익을 가져온다. 일단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게 된다. 통일편익은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일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통일을 꼭 희망적으로만 볼 수 없다.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할 것이다.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이 사례로 꼽힌다.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은 현재 남과 북의 격차보다도 훨씬 적었다. 동독은 사회기반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서독은 동독 지역에 2000조 원이 넘는 천문화적인 비용을 들여야 했다. 아직도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서독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 부담과 부작용이 나타

날 것이다.

북한의 부족한 전기, 수도, 도로 등을 정비하고 공공기관과 여러 시설을 세우려면 그만큼 남한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갈등도 심할 것이다. 1949년 광복 이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 언어도 많이 달라졌다. 분단 후 70년이 넘도록 너무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다. 쉽게 동화되어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도 통일 이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남한과 북한 역시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 후에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통일이 되더라도 무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쉽게 줄일 수도 없는 일이다. 테러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지역감정이나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 주장이 있다. 그래도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가 많다.

사설

새만금 개발과 환경 문제

새만금 개발과 환경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30년 이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의 면적은 서울시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의 간척사업이다. 길이가 33.9km인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새만금은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첫 삽을 떴다. 15년 뒤인 2006년 방조제를 완공해 바다를 막았다.

내부 공사를 시작한 지 다시 15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도 개발과 환경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세계잡버리대회가 열린다. 새만금은 처음에 식량 안보를 위해 농업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내부 토지 중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는 농지 30%, 비농지 70%로 바꿨다. 정권이 바뀌면서 개발 계획이 바뀐 것이다. 개발 사업도 우왕좌왕 했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꺼냈다.

토지를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환경해결 경제 중심의 개발을 내세웠다.

새만금에 초대형 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며 방향을 틀어 버렸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년 동안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에 무려 4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바닷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새만금호의 수질이 더 악화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새만금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과 환경 모두가 절실하다.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심각한 북한이 경제 문제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히 심각하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작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했고 흡수와 경제제재 때문이다. 밀가루나 설탕 등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고, 옷과 신발 가격은 봉쇄 이전보다 세 배까지 올랐다. 북·중 교역의 관문인 단둥 세관에는 평양으로 배송돼야 할 물건이 기약 없이 쌓여 있다.

최근 북한 내 대사관 구역에서도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 경제난이 특별대우를 받는 외교관에게까지 여파를 미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이전에 끝난 8차 당 대회의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했다. 8차 당 대회 폐회 닷새 만에 북한이 우리 정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던 것이다.

이날 최고인민회의는 당 대회 결정을 뒷받침할 조직과 법, 예산을 짜는 자리였다. 경제 실패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은 또 다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경제 계획이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군부 등 특수기관들의 사리사욕 행기와 반사회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내각 구성원이 여러 명 바뀌었다. 이례적으로 당과 내각 모두에서 직을 맡게 된 김정은 당 경제정책실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임명한 당 김두일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하기도 했다. 후임에 '예산통'인 74세의 오수용을 임명했다. 부총리 8명 중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정근 국가계획위원장은 국가 경제 계획을 총괄하게 됐다. 화화 공업상, 농업상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도 현장에서 전땀이 굵은 실무진 중심으로 교체됐다.

최고 지도자가 경제 실패를 인정한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은 반드시 사활을 걸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가진 전문 관료들을 대거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美 대통령 “7월 4일까지 나라 돌려놓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선포 1주년을 맞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첫 황금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나라를 회복할 것이며 그를 위해 5월 1일까지 모든 미국 성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텍사스주,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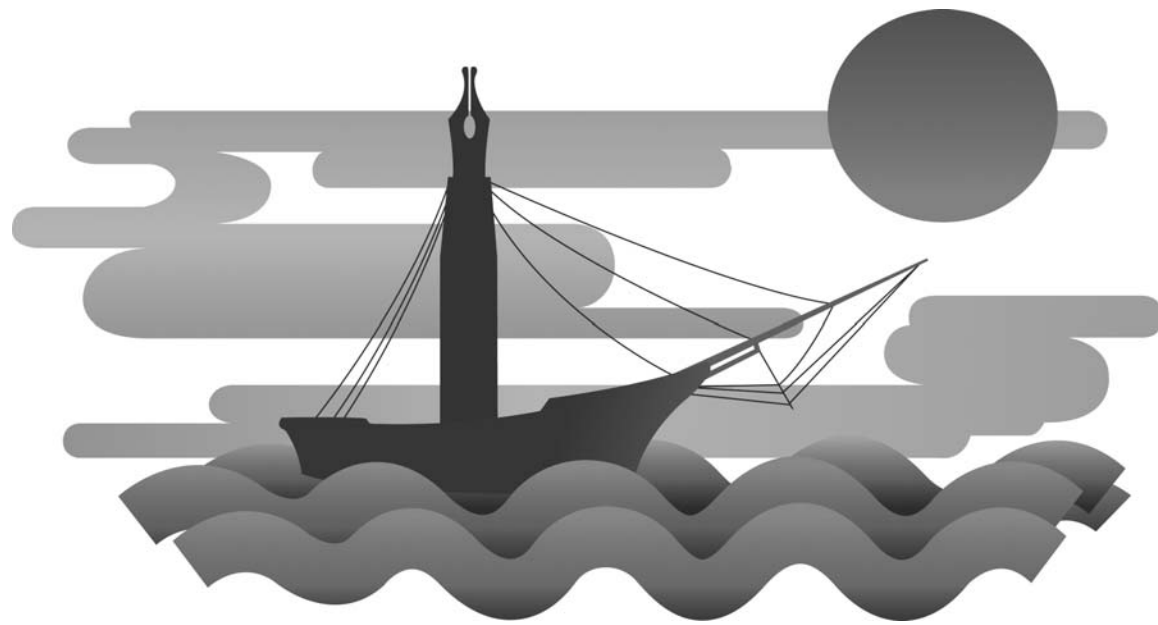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의 포트워스 기숙 시장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구경꾼들이 소물이 시범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 착용이 10일부터 해제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